



연합취재단이 진행한 설문조사 중 '동대문구 치안과 관련해 제안하고 싶은 점'으로 가장 많이 제시된 의견은 순찰 범위의 확대 및 강화, 골목 위주의 가로등 추가 설치였다.

(사진=이지수 기자)

여전히 어두운 동대문구의 밤, 범죄 배경으로 인식돼 회기역 인근, 9등급 수준 ‘성폭력 범죄 주의’ 구간

동대문구 3개 학보사 연합취재단

연이은 ‘문지마’ 범죄로 사회적 불안감이 고조된 최근, 대학가와 이를 중심으로 한 자취촌 역시 자유롭지 못하다. 낮 동안 젊음의 활력이 옹동치는 이곳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밝은 곳인 동시에, 해가 그 모습을 감추고 어둠이 드리우면 가장 어두운 곳이 된다. 우리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한국외대), 서울시립대학교(시립대)가 위치한 동대문구의 사회 안전망은 과연 안녕할까. 동대문구 3개 학보사대학주보, 외대학보, 서울시립대신문 연합취재단은 ▲이문동 ▲전농동 ▲청량리 ▲회기동 ▲회경동을 중심으로 동대문구 3개 대학가 치안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부터 대응 방안까지, 대학가 치안의 현 주소를 살펴봤다.

동대문구 대학가 당신의 자취방은 안전한가요?

낙후된 동네 분위기, 범죄 예방 시설 및 시스템 부족, 어두운 길, 대학가 특성상 존재하는 많은 술집 등으로 동대문구 대학생 자취촌 치안 문제가 계속해서 대두되고 있다. 동대문구에는 세 개의 대학이 인접하게 자리하고 있다. 우리학교와 한국외대가 서로 후문을 맞댄 채 위

치하고 있고, 회기역을 사이에 두고 시립대와 마주 보고 있다. 세 개의 대학이 인접하다 보니 각 대학이 설립된 시점부터 자연스레 대학생 자취촌이 형성됐고, 지금도 많은 대학생이 동대문구 회기동, 이문동, 회경동, 전농동, 청량리동에 거주하고 있다. 또한 자취촌 특성상 1인 가구 수도 많다. 지난 2021년 기준 동대문구 1인 가구 수는 6만 5,290가구로, 서울시 전체 자치구의 평균 1인 가구 수인 5만 9,596가구를 능가한 다. 이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9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연합취재단은 생활안전지도에서 최근 1년간 5대 범죄(강도, 성폭력, 폭행, 절도, 살인) 발생 현황을 밑도 분석 해 10등급으로 표현한 ‘범죄주의 구간-성폭력’을 살펴봤다. 등급 숫자가 높을수록 위험 지역을 의미한다. 회기역 인근은 변화한 역 앞인에도 9등급 수준의 ‘성폭력 범죄 주의’ 구간이었다. 외대앞역 큰길가는 치안 안전시설이 전무했으며 8등급 구간이 존재했다. 청량리역 인근 지역은 8등급에서 10등급에 달했으며, 역사 근처에서 성폭력 범죄 주의 구간 범위가 넓게 분포하고 있었다. 대학가 자취촌 치안 문제 발생 원인은 초기 도시 형성 과정을 살펴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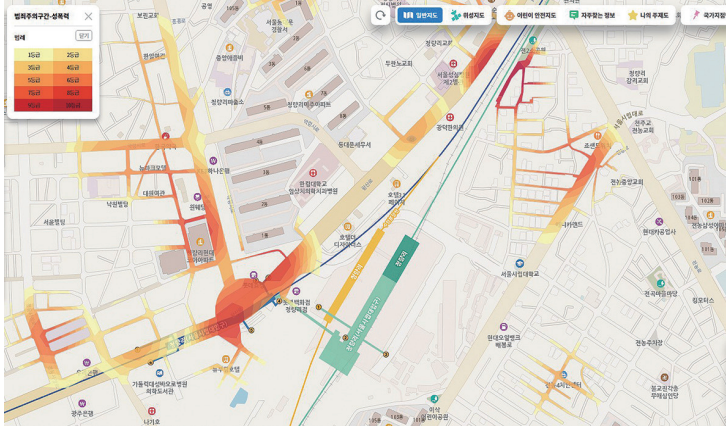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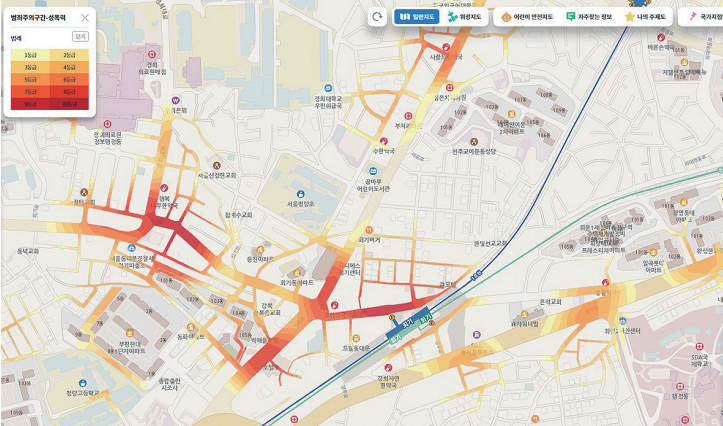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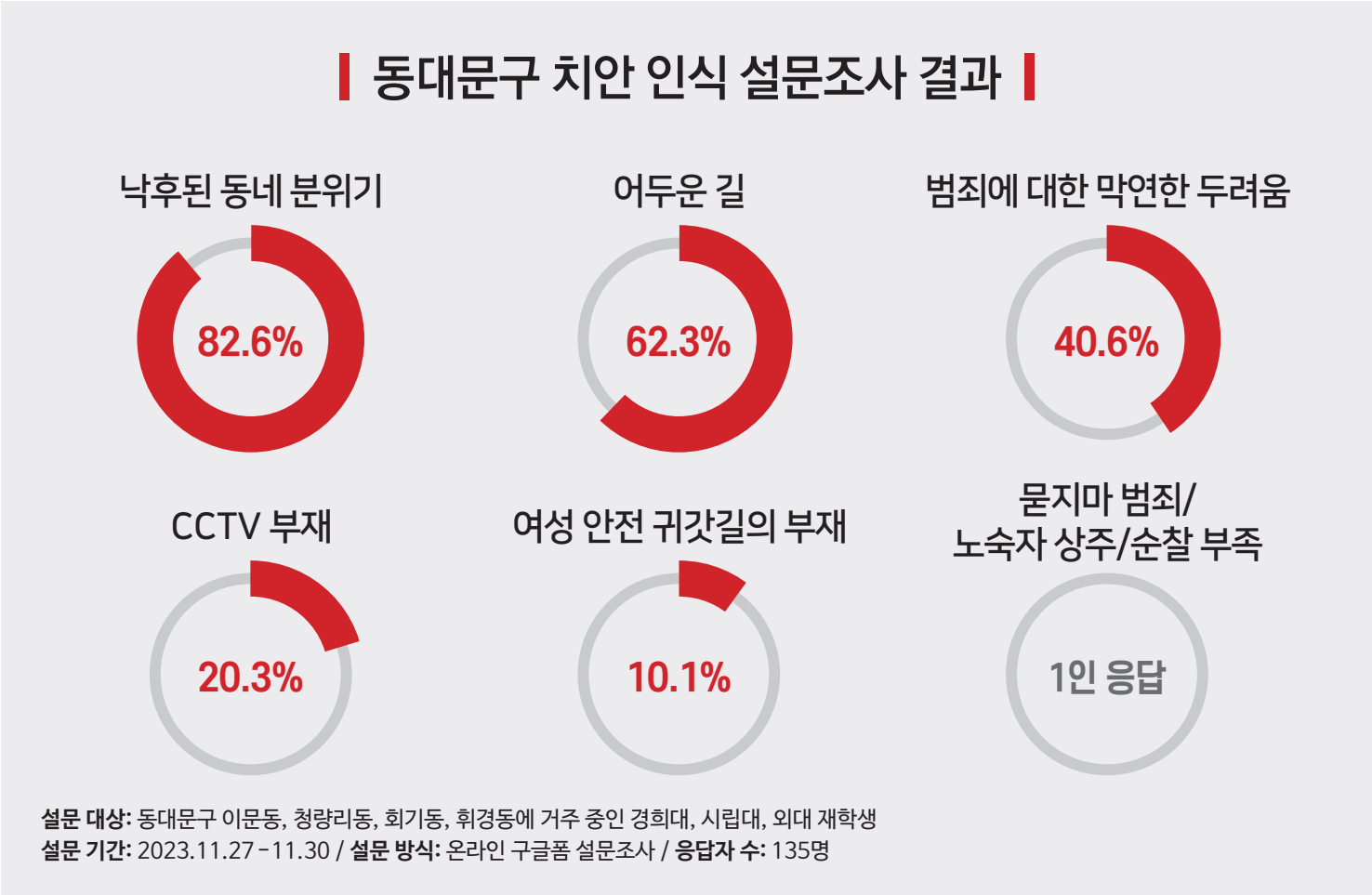
면 알 수 있다. 많은 대학이 위치한 동대문구 지역은 거주지가 형성된 후, 형성된 자취촌을 따라 길이 생겼다. 시립대 도시공학과 남진 교수는 “도시가 계획된 후 건물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필요에 의해 사람이 살기 시작하고, 필요에 의해 길을 확보하다 보니 골목길이 많고 구불구불한 환경이 됐다”고 설명했다. 대학가 주변에 골목이 많고 으스스한 것 또한 오래전 대학이 자리를 잡고 그에 따라 학생이 모여 대학가 자취촌이 생섰했기 때문이다. 생활안전지도에서 시·도, 시·군·구 별로 1~5등급 부여한 현재 동대문구의 「생활안전지수」는 2등급이다. 이때 「생활안전지수」는 「지역안전지수」의 세부 지수로, ▲인구 만 명당 생활안전관련 구급 건수 ▲골공질서 및 안전예산 지출액 비율 ▲인구 만 명당 생활안전 관련 안전신문고 신고 건수 등을 산출가중치로 둔다. 동대문구는 3등급이었던 지난 2018년을 이래로 2022년까지 2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등급 숫자가 낮을수록 안전한 지역임을 의미하기에 동대문구는 2018년 이후 생활안전 부문에서 소폭 개선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대학가 범죄 근절을 위한 시설 보완은

여전히 미흡하다. 시립대 후문은 큰길을 제외하면 유동 인구가 적어 조용하고 골목마다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없어 조도가 낮다. 우리학교와 한국외대 정문 자취촌은 변화가와 붙어 있어 취객이 많은 상황이다. 낙후된 건물이 밀집해 있다는 점 또한 문제다. 생활안전지도의 「노후건물정보」에 따르면 동대문구에 남아 있는 30년 이상 연식의 노후 건물은 ▲이문동 3,416개 ▲전농동 2,482개 ▲청량리동 1,064개 ▲회기동 705개 ▲회경동 1,054개로 총 8,721개에 달했다. 동 별로 살펴보면 회기동의 30년 이상 노후 건물 수는 705개다. 전체 건물 수 대비 30년 이상 노후건물의 비율은 61%에 달한다. 이문동과 회경동의 전체 건물 대비 노후건물 비율은 각각 65%, 59%로 회기동과 비슷한 수준이다. 특히 청량리동과 전농동의 경우 각각 전체 건물의 71%, 70%가 노후 건물인 것으로 파악돼 상대적으로 높은 노후 수준을 보이고 있었다. 특히 동대문구는 구도심이라는 특성상 재개발이 시작되거나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대학가 범죄 근절을 위한 시설 보완은

실제로 동대문구 갑 지역에서만 24군데가 재개발을 진행 중이다.

1인 가구 많은 동대문구 우범지대에 학생들 ‘불안’

국가통계포털에서 발표한 ‘범죄분석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1년 동대문구에서 발생한 강력 범죄는 총 1,518건으로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중 13번째로 높았다. 그중에서도 ‘폭행 범죄’가 924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성폭력 범죄’가 260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폭행 범죄’와 ‘성폭력 범죄’의 총 발생 건수만을 고려한다면 동대문구는 서울 25개 자치구 중 9번째로 높다. 이에 연합취재단은 ▲우리학교 ▲한국외대 ▲시립대 학생 135명을 대상으로 「동대문구 치안 인식 조사」를 진행했다. ‘거주하는 곳 주변의 치안 정도’ 응답자 중 51%가 보통-매우 낮음이라 답했다. 이유로 는 ▲낙후된 동네 분위기(82.6%) ▲어두운 길(62.3%) ▲범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40.6%) ▲CCTV 부재(20.3%) ▲여성 안전 귀갓길의 부재(10.1%)를 꼽았고 ▲문지마 범죄 ▲노숙자 상주 ▲순찰 부족이 차례로 그 뒤를 이었다.



또한 동대문구에 자취하고 있는 1인 가구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 다수의 학생이 실질적인 어두운 길이 정말 많다”며 “골목마다 차이가 심한 편이라 큰길뿐 아니라 골목 조도에도 신경 써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시립대 교환학생 나미자토 카미유 씨 역시 “근처에 음식점이나 술집도 없어 유동인구 자체가 적고 골목에는 가로등이 없어서 너무 어둡다”고 말했다.

동대문구는 불안감 해소와 범죄 예방을 위해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를 구축했지만 여전히 치안 구멍은 존재한다. 청량리동, 회경동, 회기동을 중심으로 파악한 결과 CPTED 구간이 존재하나 이 문동에는 타지역 큰길에 설치된 골목길 바닥 조명 장치와 더불어 대부분의 CPTED 구간이 존재하지

않았다. 시립대 후문 부근엔 인근 파출소나 순찰대로 없다. 회경2차와 관련해 이문동의 어두운 곳이나 인적이 드문 곳에 순찰해 달라는 요청은 정확한 행동 감지가 가능한 CCTV를 설치한다면 자치구청과 경찰서 간 연계를 통한 즉각적 범죄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도를 관리해 밝은 지대를 구축하고 CPTED 구간을 만들어 사각지대 골목을 없애 범죄율을 낮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경찰서 관할의 생활안전협의회와 자율 방범대, 구청 관할의 치안 협의회 등도 운영 중이다. 회기파출소 최민호 경위는 “회기동에서는 순찰차 2대로 곳곳을 24시간 순찰하고 있다”며 “문지마 범죄가 발생했을 때는 회기역 중심으로 집중 순찰을 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전농파출소와 이문파출소 역시 일 상적으로 112 순찰 근무를 하고 있다. 그럼에도 순찰 반경 확대 및 빈도의 증가에 대한 요구가 여전히

찾아들고 있지 않다. 이문파출소 구교혁 경장은 “치안과 관련해 이문동의 어두운 곳이나 인적이 드문 곳에 순찰해 달라는 민원이 많다”며 “취객이나 수상한 사람이 있어 순찰을 요구하는 민원과, 가로등이 없는 장소에 순찰해 달라는 민원도 들어온다”고 답했다. 한국외대 재학생 김하형(말레이-인도네시아어학 2021) 씨는 “밤 11시쯤 외대앞역 부근에 위치한 집을 가던 중 근처 호프집에서 취객의 싸움을 목격했다”며 “근방에 순찰차가 전혀 다니지 않아 너무 불안했다”며 관련 경험을 밝혔다.

이렇듯 불안감을 조성하는 지금의 치안 시설 공백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다만, 치안 시설 공백은 민간 가계가 대체하기

한다. 시립대 재학생 방 씨는 “24시간 운영되는 빨래방과 편의점이 가로등 없는 어두운 길을 비춰주고 있어 그나마 안심이 된다”고 전했다. 이에 시립대 남 교수는 “음습한 공간의 해소를 위해 민간이 운영하는 24시간 점포 등에 구청이 전기세를 감면해 주는 것도 방법”이라며 “과거 치안 문제는 ‘주체적 공공성’, 즉 경찰이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했지만 현시대는 민간과 다 함께 해결해 가는 ‘내용적 공공성’이 대두했다”고 역설했다. 또한 학내 학생자치 순찰단이 캠퍼스 내부와 대학가 방범을 자율적으로 수행하기도 했으나 권역이 넓어 학생 순찰과 방범만으로는 한계가 존재한다. 남 교수는 “동대문구 주민자치단체나 자치구 자치행정과와 협력해 대학가 일정 구역 방범을 맡기고 학교에서는 그들에게 캠퍼스 시설 사용 등에 대해 지원을 해주는 방안도 있다”며 행정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연합취재단은 동대문구 대학가 치안 개선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촉구할 위해 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의회 박남규 의원을 만났다. 박 의원은 “작년 11월 동대문구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청년들의 사회안전망 강화’ 기준을 만들었다”며 “기준이 존재하기 때문에 방범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시 구청장에게 실질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년기본조례』 제16조 3항에 따르면 ‘구청장은 청년의 안전한 주거환경과 청년 주거 밀집 지역 내 범죄예방 및 보행환경 개선 등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더불어 박 의원은 “앞으로도 동대문구의 안전망을 꼼꼼하게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전했다.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도시계획 및 건축설계 시 범죄를 일으킬 수 있는 요소들을 제거하거나 최소화하는 일련의 노력과 과정

동대문구 3개 학보사 연합취재단

이지수(대학주보) 기자
ssu1404@khu.ac.kr
김동희(대학주보) 기자
kdh0626@khu.ac.kr
조수빈(외대학보) 기자
05subin@hufs.ac.kr
지유슬(외대학보) 기자
07yusol@hufs.ac.kr
신연경(서울시립대신문) 기자
yeonk486@uos.ac.kr